광주·전남 '알박기 발전사업자' 어디 몰렸나… 회수 용량은?

한전, 광주 126.3㎿·전남 197.1㎿… 총 323.4㎿ 회수
광주·목포 연료전지 발전 186㎿ 회수…전 체 58% 점유
제주 잉여 전력 전남 송전… 계통포화 지역 갈등 우려

한국전력이 광주·전남권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망 접속 용량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허수 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용량을 재분배하면서 지역 에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명 알박기 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용량은 총 323.4메가와트(㎿)로 66만5400여 가구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력량과 맞먹는다.

하지만 오는 2031년까지 호남권에 광주·전남 회수 물량의 99배에 달하는 총 32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 물량이 대기 중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계통망 확충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호남권에 포함된 전남은 그간 제주와 함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광주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발전 전력을 보낼 전력망 접속 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남권은 2031년부터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신규 허가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

이에 정부와 한전이 임시방편으로 허수 사업자로터 계약 용량을 회수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서게 됐다. 허수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한전과 망이용계약을 체결하고도 2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이 중 일부는 법인을 통째 매각하는 방식으로 용량을 팔아넘겨서 이익을 챙기는 변칙 행위를 일삼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한전 제공 자료에 따르면 최근 광주와 전남에서 허수 사업자로부터 확보한 용량은 총 323.4㎿으로 이 중 연료전지 용량(186㎿)이 전체 58%를 점유해 비중이 가장 컸다.

지역별 회수 용량을 살펴보면 광주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자 2곳에서 72.3㎿, 54.0㎿ 등 총 126.3㎿를 회수했다.

전남은 목포 연료전지-60㎿, 영광 해상풍력 2곳-99.1㎿.10㎿, 영암 태양광-19.9㎿, 고흥-태양광 3㎿, 나주 태양광-4.1㎿, 신안-태양광 1㎿ 등 총 197.1㎿를 회수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허수 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용량은 후발 진성 사업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적기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한전의 허수 사업자 용량 회수는 전련 계통 포화 문제 해소를 위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호남권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연중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신재생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의 조치로 일부 후발 진성 사업자들은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이 전남으로 송전되고 있어서 계통 포화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중장기적인 계통 안정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수능 평가·분석자료 공개 방식 개선을"

김대중 전남교육감 "수능 성적 지역별 서열화 발표 지양해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1일 "지역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능 평가 및 분석자료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지역 인구 소멸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는 수능 성적 지역별 서열화 발표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도시와 군 지역의 과목별 표준점수 차이를 분석해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을 도출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따라 대두될 최소성취수준 미달 학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의 교육 패러다임은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수능 평가 방식은 이 같은 변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객관식 중심 평가 방식과 수능 점수에 대한 과도한 경쟁 유발로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학생 주도적 교육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수능이 치러진 1년 뒤 때늦은 지역별 서열화 발표 방식은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지역의 인구소멸을 가중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염선호 기자

선원 학대·살해, 바다에 던진 선장 2심서 "스트레스 컸다"
1심선 징역 28년, 시체유기 도운 선원도 징역 3년 선고
檢 "죄질 나빠" 중형 구형… 가담 선원도 따로 항소심 중

조업 중 마구 때리고 가혹 행위를 일삼다 숨진 동료 선원의 사체까지 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선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1일 201호 법정에서 각기 살인·시체유기와 시체유기·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각 징역 28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선장 이모(46)씨와 선원 곽모(50)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통탄스럽다. 선장은 해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선원들을 보호하고 선원 간 다툼을 제지·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가혹 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선원 곽씨에 대해서도 1심이 상해가 아닌 폭행 혐의 만을 인정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장 이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전남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로 기소됐다. 곽씨는 선장을 도와 숨진 A씨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이씨는 같은 해 3월부터 선원으로 일한 A씨가 '일을 못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마구 때리거나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이씨는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쇠약해진 이씨를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 했다.

특히 범행 당일 선장 이씨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홀로 서 있지도 못한 A씨가 15㎏ 상당 소금 포대를 들지 못하자 또다시 호스로 바닷물을 쏘고 어구나 발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정박해야 하는 날인데도 다른 선원 3명에게 A씨를 씻기도록 해 급격한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했다.

끝내 A씨가 숨지자 이튿날 오전 선장 이씨는 곽씨와 함께 사체를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숨진 A씨가 쉽사리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체를 쇠뭉치나 파이프가 담긴 어망에 묶어 유기했다. A씨의 시체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선장 이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가정사와 고된 뱃일에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곽씨 선장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4월29일 오후 열린다.

한편 주범 격인 선장 이씨와 곽씨 외에도 숨진 A씨의 학대에 가담한 또 다른 선원 3명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따로 진행 중이다.

/전민규 기자

통제된 헌법재판소 앞 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3호선 안국역 2번출구에서 재동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발표했다. /뉴시스

'금전 갈등' 사장 살해 뒤 사고사 위장 종업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수년 전 훔친 돈을 갚다 갈등이 깊어진 사장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1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25년을 받은 이모(33)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회사 돈을 횡령하다 발각된 이후 품은 앙심으로 범행했다. 단순 살인이 아니라 채무를 면할 목적의 강도 살인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 태연하게 CC(폐쇄회로)TV 영상을 삭제하고 알리바이까지 만들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6일 전남 장성군 소재 자신이 일하던 중고 카라반(캠핑차) 판매업체의 사장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년 전 A씨의 돈을 훔치다 들킨 뒤 매달 수백 만원 씩 갚는데 불만을 품었으며, 또다시 몰래 수수료를 챙겼다가 추궁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이씨는 사장 A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 이튿날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 직후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CC(폐쇄회로)TV 영상을 삭제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다.

이씨는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A씨를 범행 현장에서 옮겨놓지는 않았다"고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가 'CCTV 녹화 영상에는 A씨를 끌고 가 옮겨놓는 장면이 있다', '욕설을 듣고 화가 난다고 살인을 저지르냐' 등 A씨에 따져 묻기도 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4월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현근 기자

광주소방, 청명·한식날 산불 예방… "3~6일 특별경계근무"

광주 소방이 '청명'(4월 4일)과 '한식'(4월 5일) 기간에 성묘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해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청명과 한식날 성묘객·상춘객에 의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일부터 6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펼친다고 1일 밝혔다.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2903명의 인원과 274대의 장비가 동원돼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춘다.

또 산림 인접 마을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와 공동으로 산림화재 예방 캠페인, 전 직원 비상응소태세, 기상특보 대비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등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무등산과 금당산 등 주요 등산로에 소방공무원과 소방펌프차 등 소방력을 근접 배치해 산불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승원 기자